

지방어항도 안전점검 해야 한다

스 산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시설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어항이다. 어항이 안전해야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태·폭풍 피해 현황을 보면 국가어항 217억 5천만 원, 지방어항 603억 17백만 원, 정주어항 및 소규모어항 978억 52백만 원이다.

다행히 105개 국가어항은 지난 2005년부터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정부의 위탁사업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 안전점검은 수증정밀조사까지 포함하고 있어 말 그대로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의 적정기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게 됨으로써 어항시설의 유지, 관리, 보수 및 재난예방에 적잖은 도움이 되고 있다.

문제는 307개나 되는 지방어항이다. 국가 기간시설인 지방어항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예산, 인력, 기술력 부족과 시행에 대한 담당자들의 적극성 결여 등의 요인으로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수산업의 기본시설인 어항에 대한 이 같은 안전 불감증은 자칫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 되어야 할 재난사고의 중대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된다.

옛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다. 막상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복구에 드는 비용은 사전 안전점검 비용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도 절대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이로 인해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다면 그렇잖아도 자꾸만 줄고 있는 우리나라 수산업 인구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지방어항도 시설물 실태조사와 안전점검을 통해 재해방지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지방어항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어항관리 효율화와 재난요인의 사전 제거는 궁극적으로 현재 안전점검 미실시의 이유가 되고 있는 예산을 오히려 절감시켜 주는 효과가 있음을 꼭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307개 지방어항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간 2회 정도

실시한다고 했을 때 이에 드는 비용은 모두 합쳐도 20여억 원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나 이의 소홀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입을 피해액을 예상한다면 어찌하면 이는 너무 저렴한 비용일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이를 방관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며 향후 비난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안전점검을 위한 법령과 조직의 정비 등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이 제정되어야 하며, 지방어항 시설물의 안전점검이 법제화 돼야 한다. 또한 현재 신축 어항의 경우 국비 80%, 지방비 20%의 예산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안전점검까지 확대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 어항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전면 지방비로 충당하는 실정인데 재정 자립도가 턱없이 취약한 지방정부로서는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방어항의 안전점검으로 얻을 수 있는 파급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한 체계 도입을 들 수 있다. 무관심 때문에 빚어졌던 각종 재난을 사전에 확실히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안전관리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안전관리계획과 현장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시의적절하면서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를 기상상태에까지 원용할 경우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미 FTA 타결 이후 EU와의 새로운 FTA 협상 등은 우리의 1차 산업을 계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수산업 역시 그러한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수산업이 하물며 위험천만한 재난에 노출된 상태라면 앞으로 어업인들은 점점 더 설 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절대 부풀려 하는 말이 아니다.

지방어항의 안전점검은 이런 측면까지 고려해서 시급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지방어항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적정기능과 안전을 유지시킬 수 있어 이래저래 힘이 빠지고 있는 우리 수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